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임 규 빈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2025. 7.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임 규 빈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 약	i
1. 논의 배경	1
2.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3대 비전	4
(1)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	4
(2)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과 공약과의 관계	8
3. 정책금융의 필요성	10
(1) 정책금융이란?	10
(2) 정책금융기관의 소개	11
(3) 민간금융의 역할	16
(4) 국민주권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	18
4. 공약이행을 위한 금융정책 제언	20
(1) 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공약	20
(2) 금융이 필요한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23
(3) 금융산업 발전과 효율적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46
〈부록〉 용어설명	51

요 약

■ 기록치 않은 상황에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 이재명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
- ‘국민주권정부’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출항

○ 기록치 않은 대한민국의 상황

- 12.3 비상계엄 이후 처참히 무너진 한국의 경제상황(올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 0~1%대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세수결손 98조로 인해 현재 정부 재정 여력 열악한 상황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매우 커진 통상 불확실성
- AI 등 첨단산업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

○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 필요

-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이루기 위해 5년간 총 210조의 예산이 필요
- 국가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한계를 채워줄 금융의 역할이 절실함
-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정책과 이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개발금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등의 금융 지원 필요

○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의 3대 비전(성장·포용·대외금융) 제시

- 성장금융은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AI 등 신성장 엔진에 의한 기술주도 성장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금융
- 포용금융은 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을 이루기 위한 금융
- 대외금융은 기술주도 성장에서 필요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 위의 3가지 금융 비전은 국민주권정부의 공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3대 금융 비전 실현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공약 실현을 이룰 수 있음
-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이 매우 중요

■ 정책금융의 필요성

○ 정책금융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빈자리를 메워 줌

- 정책금융은 정부의 지원을 금융수단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원금 회수 및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여 재정정책 보다 예산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
- 정책금융은 금융 지원 대상을 특정화할 수 있어서 통화정책이 가지는 단점인 정책시차 존재와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이유로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신산업 육성 및 기후·에너지전환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엔진 발굴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
- 그 밖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에서도 정책금융의 역할 중요
- 현재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총 18개로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은행형(3개), 보증·보험형(9개), 융자형(2개), 자산관리형(4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간금융이 도와주어야 정책금융의 효과를 최대로 거둘 수 있음

-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주도의 금융공공기관이기에 예산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여 정책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통해 정부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 민간금융의 참여로 이어져야 정책금융의 효과를 최대로 거둘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금융에 정부 정책 참여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정책 필요

■ 국민주권정부의 공약이행 위한 금융의 역할

○ 금융이 필요한 국민주권정부 공약들의 이행방법 제시

- 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45개 공약에 대해 공약이행 방법 제시
- 공약이행 방법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을 모두 강조
- 주요 내용으로는 ①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방법, ② RE100 산업단지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 ③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 ④첨단산업 기반 마련과 선제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의 역할, ⑤혁신성장의 토대인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 ⑥불확실한 통상 질서 속에서 수출 강국 유지를 위한 금융의 역할, ⑦청년·고령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의 포용적 역할 등을 수록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45개 공약 실행을 위한 금융정책은 국민주권정부의 “진짜 대한민국”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산업 발전과 국민주권정부 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 정책금융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필요
- 민간금융의 정부 정책 참여 확대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금융에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정책금융이 기존의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자본시장을 통한 지분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을 직접 발굴 및 관리하는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임 규 빈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1 논의 배경

○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석열정부가 막을 내리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주권정부¹⁾ 탄생
- 국민주권정부는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과 15대 정책과제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표 1> 참조)
 -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대 정책과제 제시
 - <회복> ①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②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③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 <성장> ④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⑤성장 기반 구축, ⑥공정경제, ⑦국가균형발전, ⑧기후위기 대응
 - <행복> ⑨생활안정, ⑩생활비절감대책, ⑪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⑫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⑬저출생·고령화 대응, ⑭초등학생·어르신 돌봄, ⑮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

〈표 1〉 각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비전	정책과제
회복	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②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③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1) 한겨레, 2025. 6. 5. 『이재명 정부 명칭 ‘국민주권정부’ 확정』

비전	정책과제
성장	④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⑤ 성장 기반 구축
	⑥ 공정경제
	⑦ 국가균형발전
	⑧ 기후위기 대응
행복	⑨ 생활안정
	⑩ 생활비절감대책
	⑪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⑫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⑬ 저출생·고령화 대응
	⑭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⑮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한 녹록치 않은 상황

- 12.3 비상계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의한 통상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 경제는 비상 상태
 - 12.3 비상계엄 이후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역성장)
 -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5년 한국 경제는 1% 내외로 저성장할 것으로 전망²⁾
- 윤석열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정부 재정 여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
 - 윤석열정부의 3년간 세수 결손 98조 육박
 - 2022년 22.1%였던 조세부담율은 2024년 17.6%까지 급감하여 17.9%였던 2017년보다 더 낮은 수치로 퇴행
- 전 세계 국가들이 AI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은 AI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투자와 기술력 모두 미국과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
 - 2024년 기준 국내 AI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액은 13.3억 달러(약 1.8조원)

2)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IMF와 OECD는 1.0%, JP 모건은 0.5%, Capital Economic는 0.9% 전망

- 미국은 1,098.8억 달러, 중국은 92.9억 달러로 국내 민간투자액은 미국의 1.2%, 중국의 14% 수준에 불과
- 토터스미디어(Tortois Media)가 2024년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The Global AI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7점(100점 만점)으로 종합 6위 기록³⁾
- 국민주권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과 성장,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 공약실현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210조원으로 추정
- 예산 집행 기간: 5년(임기) 동안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
- 연간 필요 예산: 연평균 안정적인 40조원 확보 필요
- 주요 공약별 예산 : ①AI 산업 등 신성장 산업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계획, ②아동수당 확대(만 18세 미만까지), 연간 약 5조 4,600억 원 소요 추정, ③이외 K-콘텐츠, 방위산업, 지역화폐 확대, 노동·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예산 배정 예정

○ 지금은 금융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

- 국민주권정부가 처한 상황(지난 정부의 98조 세수 결손, 불확실한 통상질서, 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 현재 국가의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약 210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절실
- 특히, 국가 산업 정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금융기관의 정책금융과 정책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금융의 참여가 절실

○ 본 보고서는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초점

- 올 6월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과 15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음

3) 글로벌 AI 지수 상위 6개 국가 : 1위 미국(100점), 2위 중국(54점), 3위 싱가포르(32점), 4위 영국(30점), 5위 프랑스(28점), 6위 한국(27점)

- 특히, 전 정부였던 윤석열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정부 재정 여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회복과 성장을 통한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금융의 지원이 필요
-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민·관·금융 원팀 코리아” 필수
- 본 보고서는 국민주권정부의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금융의 비전과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 제시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금융 정책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3대 비전

(1)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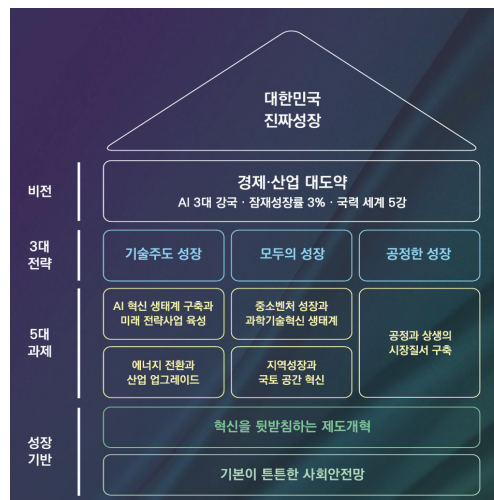
○ 성장금융 : “진짜성장”을 이루기 위한 금융의 역할

- 성장금융은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적 성장인 ‘진짜성장’의 기반인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금융(‘진짜성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글상자 1> 참조)
- 기술주도 성장에 필요한 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전환 및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성장금융 필요
 - 국민주권정부의 ABCDEF산업(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필요(<예> 100조 규모의 AI 국민펀드)
 - 대규모 투자 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성장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
- 모두의 성장에 필요한 중소벤처 성장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과 지역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위해 성장금융 필요
 -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중소벤처 성장을 위한 펀드 조성 필요

- 정책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지역은행이 협력하여 지역성장 및 국토 공간 혁신을 위한 펀드 조성 필요

〈글상자 1〉 국민주권정부의 성장전략 : 진짜성장4)

(1) ‘진짜성장’ 개념도



(2) ‘진짜성장’ 전략

○ 성장 브랜드 : 대한민국 진짜성장

-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이 아니라 경제구조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지속적 성장
- 소수만이 혁신하고 그 과실을 차지하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체감형 성장

○ 비전 : 경제·산업 대도약

- AI 3대 강국·잠재(진짜)성장률 3%·국력 5강
 - 현재: AI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 6~12위

○ 3대 전략 :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 기술주도 성장(기업영역)
 - A부터 F까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업)을 키우고, 글로벌(G) 산업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산업 대도약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산업·수출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강화
 -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의 탄력성을 강화
- 모두의 성장
 - 대기업, 특정지역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비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성장
- 공정한 성장
 - 지대추구와 갑의 횡포를 극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로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

(3) ‘진짜성장’ 5대 과제



○ 포용금융 : 국민 모두의 참여와 행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

- 포용금융은 ‘진짜성장’의 3대 전략 중 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과 성장기반에

4)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II. ‘진짜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해당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필요

- 포용금융은 서민·청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소외된 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에 참여하는 공정한 대한민국과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은 서민·청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운영 중인 서민·청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햇살론15, 새희망홀씨, 사잇돌 대출, 햇살론 банк, 햇살론 유스, 미소금융,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안정망 대출II 등이 있음⁵⁾
- 포용금융은 금융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을 주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

○ 대외금융 : 수출 강국 유지와 경제안보를 위한 금융의 역할

- 대외금융은 '진짜성장'의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
- 대외금융은 2024년 전 세계 수출량 7위인 한국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첨단산업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
 -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수출량은 6,838억 달러로 세계 7위 기록
 - 2024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32%
 -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 세계의 첨단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위한 금융의 역할 중요
- AI 등의 첨단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위한 대외금융 필요
-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한반도 주변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벗어나 신남방, 신북방, 글로벌

5)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https://www.kinfa.or.kr/main.do>)

별 사우스, EU 및 유럽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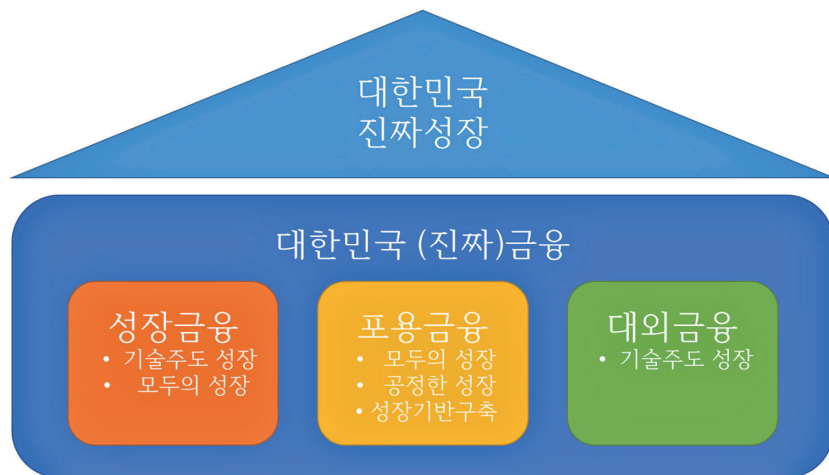
- 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금융지원
과 수출 유망 기업에 대한 민간금융의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정책 필요

(2)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과 공약과의 관계

○ 성장·포용·대외금융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금융 비전

-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은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 비전
과 금융의 역할을 강조(〈그림 1〉 참조)
- 성장금융은 ‘진짜성장’의 토대가 되는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이루
기 위한 금융의 역할 강조
- 포용금융은 ‘진짜성장’의 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조
- 대외금융은 ‘진짜성장’의 기술주도 성장의 한 부분인 수출 강국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업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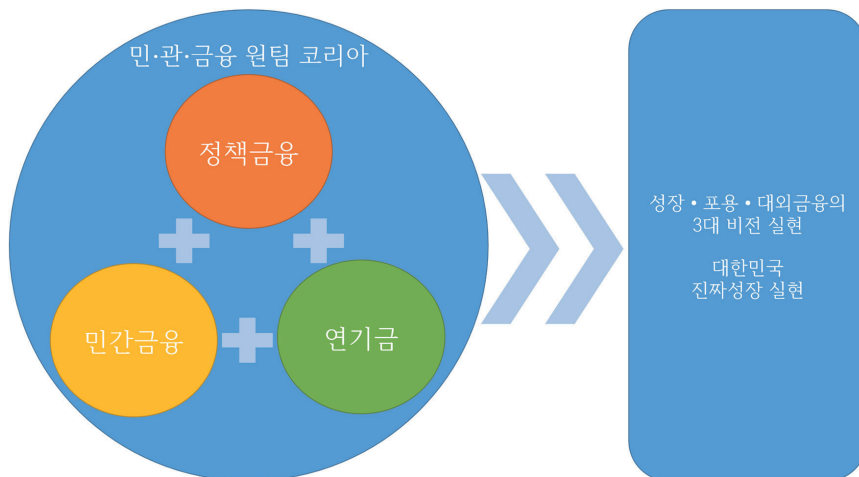
〈그림 1〉 성장·포용·대외금융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



○ 성장·포용·대외금융 실현을 위해 민·관 금융 원팀 필요

- 국민주권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 금융 원팀 필요
- 성장금융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포용금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대외금융을 위한 수출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민간금융이 한 팀이 되어야 함(그림 2) 참조)
-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주도적인 자금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금융에게는 충분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
- 정책금융이 중심이 되지만, 민간금융이 자생적으로 시장을 통해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 육성 정책 필요

〈그림 2〉 민·관·금융 원팀 코리아



3

정책금융의 필요성

(1) 정책금융이란?

○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
-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
 - 재정정책은 주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이나 복지 혜택에 사용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함
 - 재정정책은 정부의 세금 수입, 즉, 세입의 양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음
- 통화정책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 화폐의 양과 이자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의 흐름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
 -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이자율을 낮춰서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 경제 내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하고, 반대로 호황일 때에는 이자율을 높여서 자금의 유동성을 낮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조정
 - 통화정책은 화폐량 조절을 통한 이자율 변화가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정책시차가 존재하고,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기까지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 존재
- 재정정책은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세운 공공사업과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부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로 쓰임

○ 정책금융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빈 곳을 채워줌

- 정책금융은 정부 주도로 세운 금융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민간의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금융 공급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 정책금융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낮은 투자 수익률의 이유로 민간의 상업금융이 금융 공급을 꺼리는 분야에 정부 자금을 금융 공급의 형태로 지원하는 공

공적 성격의 금융을 통칭

- 따라서 정책금융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원의 형태로 재정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금융 공급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어 통화정책의 일부 성격도 갖고 있음
- 정책금융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회수에 용이하여 세입의 양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재정정책의 단점을 보완
- 또한 정책금융은 자금 지원의 대상을 특정화하여 금융 공급을 해주기에 통화정책이 가진 단점인 정책시차와 불확실성을 보완

(2) 정책금융기관의 소개

○ 정책금융기관의 분류

- 현재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은 총 18개로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은행형(3개), 보증·보험형(9개), 융자형(2개), 자산관리형(4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2〉 참조)
- 은행형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간접적인 보증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장을 통한 은행 채권 발행 및 개인 예수금 등으로 재원 마련
 - 은행형 정책금융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3개 기관
- 보증·보험형 정책금융기관은 기금 형태로 운용되는 기관이 주를 이루며, 민간 출연금, 보증·보험료 등의 자체수익과 추가적인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 마련
 - 보증·보험형 정책금융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의 9개 기관
- 융자형 정책금융기관은 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융자를 통한 금융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기금 채권 발행 및 정부 출연금, 정부 차입금 등으로 재원 마련
 - 융자형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개 기관

- 자산관리형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관리를 통한 정책금융 업무를 하고 있음
- 자산관리형 정책금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4개 기관

〈표 2〉 각 유형별 정책금융기관 주요 현황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 목적(설립 근거 법률)	주요 업무
은행형 (3개)	한국수출입은행	1976년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1조)	해외건설·플랜트 등 주요 수출산업 부문 금융지원, 해외투자자금·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	1954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 조정
	중소기업은행	1961년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중소기업 자금대출·어음할인,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
보증·보험형 (9개)	기술보증기금	1989년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유동화 회사보증(P-CBO), 기술혁신 지원, 기업 경영지도
	신용보증기금	1976년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신용보험, 보증연계투자, 창업기업지원신용정보 종합관리, 기업 경영지도
	주택도시보증공사	2015년 ⁶⁾	주택건설 보증 등 주택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보증, 주택관련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년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유동화증권 발행, 보증자리 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주택연금(역모기지)보증 공급
	한국무역보험공사	1992년	무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 (「무역보험법」 제37조)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무역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예금보험공사	1996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 (「예금자보호법」 제3조)	예금보험기금 조성, 부실 금융기관 정리, 보험금 지급, 공적지원자금 회수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 목적(설립 근거 법률)	주요 업무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2000년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개인 부담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수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35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연수, 개인 부담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서민금융 진흥원	2016년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청년·대학 생애 대한 정책서민금융지원 및 금융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한국해양 진흥공사	2018년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운 경쟁력 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차입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해운시황정보 제공 및 거래지원
용자형 (2개)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1979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8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2014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업무의 위탁 운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자산 관리형 (4개)	한국자산 관리공사	1962년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신용회복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한국 투자공사	2005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운용업무의 효율적 수행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위탁기관에서 받은 자산의 관리·운용
	한국 벤처투자	2005년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육성
	한국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2018년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지원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등

자료: 안옥진(2022)7)의 9~11페이지의 [각 유형별 금융공공기관 주요 현황]에서 발췌

6)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 →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 → 2015년 「주택도시보증법」 제정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재 설립(안옥진, 2022)

7) 안옥진. (2022).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공공기관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금융기관의 주요 업무 분야

- 정책금융기관의 주요 업무 분야는 ①중소·벤처·개발금융, ②수출·무역금융, ③주택금융, ④서민금융, ⑤특수목적 정책금융으로 나뉨
 - 정책금융업무와 금융 3대 비전과의 관계 : ❶성장금융을 위해 중소·벤처·개발금융 필요, ❷포용금융을 위해 주택금융과 서민금융 필요, ❸대외금융을 위해 수출·무역금융 필요
- 업무 분야에 따라 중소·벤처·개발금융을 담당하는 8개 기관, 수출·무역금융을 담당하는 2개 기관,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2개 기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1개 기관, 특수 목적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5개 기관으로 구분(〈표3〉 참조)
- 중소·벤처·개발금융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 발굴과 신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분야
 - 중소·벤처·개발금융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등에서 담당
- 수출·무역금융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외 실물거래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 공여(대출, 보증, 보험 등)를 의미
 -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수출·무역금융을 수행하고 있음
- 주택금융은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주는 금융지원을 의미
 - 주택금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담당
-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수요자 및 금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여신, 채무감면, 신용회복 등의 금융 지원을 의미
 - 서민금융은 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
- 특수목적 정책금융은 위의 4가지 분류에 들지 않는 특수목적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
 - 특수목적 정책금융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운산업 관련 금융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회사 부실 자산 정리), 예금보험공사(예금자 보호), 한국투자공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외화자산 운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해

외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지원) 등이 있음

〈표 3〉 정책금융 지원 분야 별 정책금융기관 구분

정책금융 분야	주요 업무	정책금융기관	설립 근거법 상 설립목적
중소·벤처·개발금융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 산업의 개발·육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 시장 안정 등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한국산업은행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기술보증기금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신용보증기금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개인 부담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수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국벤처투자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수출·무역 금융	수출입·무역 등 대외거래 관련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 (「무역보험법」 제37조)
주택금융	주택 관련 각종 보증 업무 및 주택저당 채권의 유통화 등 주택금융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건설 보증 등 주택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의 유통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서민금융	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책금융 분야	주요 업무	정책금융기관	설립 근거법 상 설립목적
기타	특수목적 정책금융 수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운 경쟁력 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 (「예금자보호법」 제3조)
		한국투자공사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 운용업무의 효율적 수행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지원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자료: 안옥진(2022)(각주 7. 참조)의 37~38페이지의 [정책금융 지원 분야 별 금융공공기관 구분]의 내용을 발췌하여 저자의 정책금융 주요 업무 분야에 맞게 재구성

(3) 민간금융의 역할

○ 정책금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 중요

- 정책금융 주체 기관들은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함
-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채워 주는 포용금융에 정부의 정책금융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기 어려운 신산업 육성과 포용금융 분야에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민·관 금융기관의 협력 중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금융권에게 정부 정책 참여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정부의 민간금융 정책금융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정책의 예로는 ①예대율 산정 우대, ②금리·한도 우대, ③실적 가중치·내부평가 반영, ④신속 투자 인센티브, ⑤민간금융 연계 인센티브 등이 있음(〈표4〉 참조)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 유형의 예로는 ①수출금융 종합지원, ②동반성장대출/우대대출, ③정책금융지원협의회, ④모바일 원스톱 대출 서비스, ⑤ 해외 프로젝트 금융 등이 있음(〈표5 참조〉)

〈표 4〉 정부의 민간금융 정책금융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정책의 예시

인센티브 유형	주요 내용
예대출 산정 우대	중금리·정책금융 대출 실적 예대출 산정 시 우대 반영
금리·한도 우대	정책금융상품 취급 시 금리 감면, 대출 한도 확대
실적 가중치·내부평가 반영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사 내부평가에 가중치로 반영
신속 투자 인센티브	정책펀드 운용사에 신속 투자 시 초과수익 인센티브, 관리보수 상향 등
민간금융 연계 인센티브	성실 상환자 민간금융 연계 시 인센티브 제공

자료: ①구정환(2025)⁸⁾, ②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소식』, ③금융위원회, 2024. 12. 26. (보도자료) 『‘25년 정책금융 공급 247.5조원 136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의 내용을 이용해 작성

〈표 5〉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 유형의 예시

협력 유형	주요 내용 및 예시
수출금융 종합지원 ⁹⁾	정책금융+민간금융 공동 대출, 금리·보증료 우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 구축
동반성장대출/우대대출 ¹⁰⁾	대기업 예치금·출연금 활용, 정책금융+민간은행 협력, 협력사 대상 우대금리·보증 제공
정책금융지원협의회 ¹¹⁾	정부·정책금융·민간금융 정례 협의, 산업별 전략과제 논의 및 자금공급 방향 설정
모바일 원스톱 대출 서비스 ¹²⁾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 협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간편 신청·실행
해외 프로젝트 금융 ¹³⁾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 선분담, 민간금융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 8) 구정환. (2025),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의 연계강화, 금융포커스, 한국금융연구원.
- 9) 금융위원회, 2023. 8. 16. (보도자료) 『민간·정책금융이 함께 수출을 총력지원 합니다.』,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하여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 10) M투데이, 2025. 3. 25. 『“1천억원 규모 자금 확보”, KB국민은행, 현대차·기아 협력사 대상 동반성장 금융지원』 - 신보와 3자 협약 체결... 1~3차 협력사에 최대 50억 대출·우대금리·보증 지원, 현대차그룹, 이차보전 자금 제공으로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강화
- 11) 제 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2024. 12. 24. (보도자료) 『‘25년 정책금융 공급 247.5조원 136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 12) 중소벤처기업부, 2025. 2. 16. (보도자료) 『중기부-정책금융기관간 머리맞댄 협의회 열려』, “올해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 13) 금융위원회, 2023. 8. 16. (보도자료) 『민간·정책금융이 함께 수출을 총력지원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출할 수 있도록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민주권정부에서 민간금융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

-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산업재편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역할 중요
 - AI 등 첨단전략산업 위한 100조 원 AI국민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력 필수
 - AI국민펀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경제 1분과)의 보고에 따르면 모펀드에 정부 재정·연기금·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 자펀드에 민간금융과 개인투자자가 50조 원 이상 출자하는 구조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산업재편 및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민간금융기관의 도움 필요
-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과 주택금융을 위해서도 민간금융(은행권)의 도움 필수
 -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와 사업정리 및 업종전환을 위한 민간금융의 도움 필요
 - 청년시대의 미래설계와 자산증식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도움 필요
 -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housing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금융기관의 도움 필요

(4) 국민주권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

○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 국민주권정부는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과 15대 정책과제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표 1> 참조)
- 15대 정책과제 중 11개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 필요(<표6> 참조)

〈표 6〉 각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별 필요한 정책금융의 종류

비전	정책과제	필요한 정책금융
회복	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수출·무역금융
	②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③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비전	정책과제	필요한 정책금융
성장	④ 시등 신산업 집중육성	중소·벤처·개발금융, 수출·무역금융
	⑤ 성장 기반 구축	중소·벤처·개발금융, 수출·무역금융
	⑥ 공정경제	서민금융
	⑦ 국가균형발전	중소·벤처·개발금융, 수출·무역금융, 주택금융
	⑧ 기후위기 대응	중소·벤처·개발금융, 수출·무역금융
행복	⑨ 생활안정	서민금융, 주택금융
	⑩ 생활비절감대책	서민금융, 주택금융
	⑪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중소·벤처·개발금융, 서민금융, 주택금융
	⑫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⑬ 저출생·고령화 대응	서민금융, 주택금융
	⑭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서민금융, 주택금융
	⑮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	

○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

- 국민주권정부의 11개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도 같이 참여해야 실현 가능성 높아짐
- 대규모 산업 및 수출지원 자금 조성과의 관련이 있는 중소·벤처·개발금융과 수출·무역금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재원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금융이 협력
-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금 조성에 협력하는 민간금융에는 금리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다양한 참여 인센티브 제공(〈표4〉 참조)
- 서민금융과 주택금융의 경우 민간금융기관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예대율 산정 시 우대, 대출금 항목에서 중금리대출의 일정 비율(예:10%) 추가 인정 등의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표4〉 참조)

4

공약이행을 위한 금융정책 제언

(1) 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공약

○ 금융이 필요한 각 15대 정책과제별 공약들

- 3대 비전과 15대 정책의 분류법에 따라 분류된 각 정책과제 및 공약별 공약이행을 위한 방법 제시(〈표7〉 참조)
- 〈표3〉 「각 3대 비전과 정책과제 별 필요한 정책금융」의 종류에 따라 금융이 필요한 45개 공약의 이행방안을 구체화 함
-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주체인 금융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같이 참여하는 민·관·금융의 협력 강조

〈표 7〉 각 정책과제 및 공약별 이행방안

정책과제 및 공약명	공약 이행방안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01. 국제적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는경제외교	• 해외사업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으로 경제외교 성과창출 및 수출시장 다변화
02. 외교영역 확대 및 다변화	• 글로벌 사우스 및 주요 선진국과 협력 강화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03.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	• 글로벌 사우스 진출 및 대미 협력과 융·복합 제조, 수소에너지 등 수출산업 육성
10.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외교로 G7+ 국가 도약	• 저소득국 개발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강화 •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형 경제협력 확대 • 국제사회 공동과제 연대 위한 개발금융 활용
13.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14.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16. 남북 인도주의 및 교류협력 모색	•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과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지원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01. 인공지능 대전환(AI) ¹⁴ 을 통해 AI 3강 도약 02. AI 시대,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03.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 하드웨어-인프라-소프트웨어 등 모든 밸류체인 지원하여 인공지능 대전환 • AI의 산업현장 활용 및 수출산업화 • 민간금융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기업 지원 • 민·관 합동기금 「가칭AI 스케일업 코리아펀드」 조성 • AI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 맞춤형 「론펀드」 조성

정책과제 및 공약명	공약 이행방안
	• AI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GPU 공동펀드 조성
10.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11.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 신약개발 R&D, 해외 제조사 M&A 지원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화 견인
12.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	
13.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 확대	• 콘텐츠 제작-유통-수출-해외사업까지의 모든 단계 금융지원으로 K-콘텐츠의 수출경쟁력 제고
14. 한류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15.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 진입	• 방산금융 패키지 일괄 제공과 수출지역 및 품목 다각화 지원
16.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위한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	• 빅테크 강국을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 첨단산업 소부장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 • 첨단산업 기술 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 • 조선, 철강·석화 등 고부가·탈탄소 전환 • 경쟁력 산실산업에 대한 신속한 산업재편 및 구조 조정을 위한 민간금융의 지원 •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위한 「자산유통화 사모대출펀드(PDF)」 설립
17.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안보 기반 구축	•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폐수 등) 지원 강화 • 공급망기금 지원 확대로 첨단산업 핵심소재 확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
18.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자금공급을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국민펀드 조성 • 반도체 지원 대폭 확대로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뒷받침
성장기반 구축	
06.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08.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 형식의 인큐베이팅
11.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 창업단계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성장펀드조성(정부·금융회사·지자체·지역사회 공동출자)
15.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산업의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화	• 고부가 K-공항 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고효율·친환경 항공기 도입, MRO 사업 참여 등 항공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6.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 북극항로 거점 배후단지 조성 위한 부산·울산항 등 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 • 쇄빙선 등 극지운항 특수선 개발·제작 지원 • 국익 관점 북극항로 논의 위한 국제협력 지원
15.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해운 강국 실현	•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국제선사 선박금융 확대, 미 군함 MRO 수주 지원, 중소조선사 상생협력 등으로 해운강국 도약

정책과제 및 공약명	공약 이행방안
1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20.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중견·대기업으로 도약 뒷받침
21.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	• 중소기업 ESG 경영혁신 및 탄소중립 지원 •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환경 대응력 제고 • 구조조정 대상 산업 내 중소기업 지원
22.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	• 민·관·금융 원팀 코리아로 해외 고부가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확대
24.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 강화
2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 ESG 금융 지원 확대로 우리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견인
공정경제	
15. 청년층의 자산증식 지원과 금융접근성 제고	• 청년·서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국가균형발전	
04.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대표 전략산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제고
18. 농업의 미래농산업으로 전환	• 농식품·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 미래형 푸드테크 산업 R&D 및 M&A 지원
기후위기 대응	
01.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	• 기후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02.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탄소중립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친환경 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 등 친환경 분야 지원 확대
03.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 해상풍력 발전 지원,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지원
04.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신재생 발전과 송전망 부문 경쟁력 확보로 에너지안보·저탄소 전환 동시 달성
생활비 절감대책	
03.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확대	• 청년 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01.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 소상공인 임차보증금 유동화 지원
04.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 건설	•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은행 자체 상품 출시
저출생·고령화 대응	
08. 고령자 친화주택·은퇴자 도시 통해 어르신 주거문제 해결	• 양질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
10.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노후소득 보장 대책 강화	• 주택연금의 일시적 지급방식 확대
광역공약	
02.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부산 육성	• 북극항로를 위한 육해공 트라이포트의 부산 육성
07. 북극항로시대 대비해 울산항을 오일·가스 등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기지로 육성	• 부산·울산항 등에 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

(2) 금융이 필요한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① [공약 01] 국제적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이행방안 01] 해외사업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으로 경제외교 성과창출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입은행과 같은 수출·무역금융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사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운영으로 경제외교 성과창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
- 정부 대외경제정책의 효과적 지원 위해 주요국 진출전략 수립부터 사업발굴·개발, 금융주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 구축
- 특히, 우리기업의 참여 프로젝트에 수출입은행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기금 등을 이용하여 맞춤형 제공하는 금융패키지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효과적 지원

② [공약 02] 외교영역 확대 및 다변화

[이행방안 01] 글로벌 사우스 및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개발금융기관(DFI) 기능을 통해 미·일·EU 등의 선진국간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확대
- 경험증진자금(EDPF)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시장성 자금인 개발도상국민간투자자금대출(PDIF)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국내 희소 광물자원 도입 위한 개발사업 선제 지원
- 한국 수출입은행·미국 개발금융공사(DFC)·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3자 MOU(2023년 8월 체결)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탄소중립·공급망 분야 공조
- 유럽의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

14) AX는 AI Transformation의 약어

③ [공약 03]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

[이행방안 01] 글로벌 사우스 진출 및 대미협력과 융·복합 제조, 수소에너지 등 수출산업육성

- 수출입은행 등의 수출·무역금융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수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양적 성장과 우리 기업의 환경·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중국·미국 등 특정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수출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 촉진
 - 중장기 신수출사업 육성을 위한 R&D, M&A 지원 확대와 함께, K-뷰티·푸드·콘텐츠 등 한류산업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
 - 자동차·철강 등 미 관세부와 산업의 미국 내 생산설비 구축¹⁵⁾, LNG 수입·인프라, 조선업 협력 등 지원
 -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배출 산업의 친환경사업구조전환을 위한 R&D, M&A, 설비투자 지원

④ [공약 10] 국제적 공헌과 국력에 걸맞는 외교로 G7+ 국가 도약

[이행방안 01] 저소득국 개발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강화

-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강화로 한국의 국가 위상 강화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저금리 차관과 정책자금 연계, 민간재원 유치 등 전략적 재원활용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기 기본약정을 활용하여 중점국과 대규모 재원공급이 필요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지원

[이행방안 02]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형 경제협력 확대

- 수출입은행이 주도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금융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상생을 도모하여 경제영역 확장 및 국력에 부합하는 금융지원

15) 지원사례(수출입은행 15억 달러) : 현대차·SK온,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신설(대출 8억 달러, 보증 7억 달러)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점분야인 그린, 디지털, 공급망 부문의 지원 확대 및 G7 국가 개발금융기관(DFI)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기여
- 개발도상국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략적 자원품목에 부합하는 성장형 신기술 분야 사업발굴 모색
- 공적개발원조(ODA)를 한류 문화·콘텐츠 개발협력과 결합하여 우리문화 전파 수단으로 활용 모색

⑥ [공약 13]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공약 14]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

[공약 16] 남북 인도주의 및 교류협력 모색

[이행방안 01]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과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지원

- 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 단계별 정책 수단과 자원 활용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남북한 경제 시너지 창출 및 남북한 상생과 공동번영 기반 마련
- 대북지원 경험과 개발도상국 인프라 및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단계별 금융솔루션 마련
-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협력 단계별 최적의 정책수단·재원을 활용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및 경제통합 마중물 역할 수행
- 이산가족 교류, 기후협력, 방역·보건 협력 등 지원 통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및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철도·도로 공동 조사, 경원선 연결 등 중단된 기존의 지원 사업을 우선으로 경제협력 기반 구축 사업 지원
- 남북 경제협력 기업 현황 파악 및 경영정상화 지원

○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① [공약 01] 인공지능 대전환(AI)을 통해 AI 3강 도약

[공약 02] AI 시대,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공약 03]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이행방안 01] 하드웨어-인프라-소프트웨어 등 모든 밸류체인 지원하여 인공지능 대전환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중심이 되어 AI 생태계 밸류체인 분야에 전폭적 지원
 - 국내 AI 생태계 밸류체인 경쟁력 확보와 관련 인프라 구축(데이터 센터 및 전략망 확보 등)을 위해 적극 지원
 - 지원대상은 모든 AI 밸류체인 영위기업
 - 자금용도는 기업의 신규 운영자금, 설비투자, M&A(인수금융) 및 펀드 출자
 - 지원방식은 대출, 직·간접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차관단 대출(Syndicated Loan) 등의 방식을 이용
 - [참고사항] 수출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투자제한¹⁶⁾해소 필요
- 데이터센터와 전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특수목적법인(SPC) 등 구조화금융 방식의 대규모 설비투자 지원

[이행방안 02] AI의 산업현장 활용 및 수출 산업화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저리대출, 직·간접투자로 초기 기술보유 기업의 R&D투자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AI 서비스(스마트카, 스마트공장, 스마트홈, AI 번역, AI 신약개발 등)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정밀 지원하고 AI 서비스 신규 유망사업의 수출산업화 추진

[이행방안 03] 민간금융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기업 지원

- AI 환경 구축 : AI 데이터센터 조성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데이터센터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 관련 투자·지원체계 구축
 - 컨소시엄 투자, 건설비용(부지 매입 등), 장비 구입자금 대출
- AI 기업 지원(〈표8〉 참조) :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국가, 협회), 자금 + 비금융지원(은행)
 - 국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협회(한국인공지능협회 등)와 협업, 전방위 지원

16) 수출입은행은 펀드에 한하여 투자 가능(VC 투자불가).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 건별 기재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 기업의 대출·보증과 연계할 때 한하여 투자가 가능

〈표 8〉 민간금융의 AI 기업 지원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국가	선발	· 국가 전략방향에 맞는 AI 기업 사전 공모, 심사 및 추천
협회	인증	· AI 기술평가, 전문 인증 및 등급 부여 등
은행	맞춤형 패키지	· 기술평가 기반 대출한도 우대, 신보/기보 특례보증 연계 지원 · 비상장기업 대상 IPO 컨설팅 및 Pre-IPO 금융지원 등
	비금융	· AI VC 매칭, 특허/IOP 전략 컨설팅 등 규제 대응 지원

- 민간금융의 정부 주도 정책사업 지원 인센티브로 위험가중치 완화 필요 (〈표9〉 참조)
- 운영방식(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및 지원 방법(대출, 지분)에 따라 위험가중치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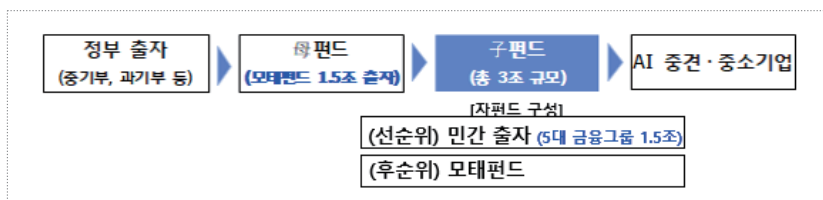
〈표 9〉 위험가중치 완화 현황

구 분		대 출	지분투자(주식)	비 고
현 행		100%	400% (비상장)	
완화제언	BTL	0%	100%	민간 시설 건설 → 소유권 정부 이전 → 민간 재임대 (수익 보장)
	BTO	0%	250%	민간 시설 건설 → 소유권 정부 이전 → 민간 직접 운영

[이행방안 04] 민·관 합동기금 「^{가칭}AI 스케일업 코리아펀드」 조성

- 정부·민간 공동 출자(50:50)하여, 총 3조원(안) 규모의 펀드 조성 (〈그림 3〉 참조)

〈그림 3〉 「^{가칭}AI 스케일업 코리아펀드」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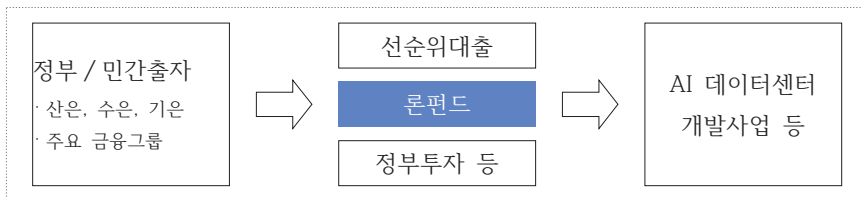


- AI 스타트업 지원에 비해 자금 지원이 부족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 민간금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후순위 지원과 위험가중치 완화 필요

[이행방안 05] AI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 맞춤형 「론펀드」 조성

-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론펀드 조성 및 운영(〈그림 4〉 참조)
 - 민·관이 운영 예정인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은행 선순위대출 취급
 - 민간 은행은 해당 대출 및 “(가칭) 데이터센터 론펀드” 조성 참여
 - 해당 펀드 조성 후 후순위 정부 투자 등 추가 지원

〈그림 4〉 AI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 맞춤형 「론펀드」 조성 방안



- 정부의 후순위 지원과 위험가중치 완화 등의 민간금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이행방안 06] AI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GPU 공동펀드 조성

- AI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필요
 - 국책은행·금융권 공동 출자로 GPU 구매 공동펀드 조성 → GPU 자산 확보
 - AI 창업기업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GPU 제공 → 사업성과에 따른 수익배분
- 공동펀드 지원업체에 대한 정부 R&D 자금 추가지원 등 민·관 협력 확대 필요
- 민간금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험가중치 완화 필요

② [공약 10]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공약 11]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이행방안 01] 신약개발 R&D, 해외 제조사 M&A 지원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화 견인

- 수출입은행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지원을 강화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화 및 글로벌 진출을 도모

- 정책금융 지원 확대(생산설비 확보, 연구개발, 원료확보)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의료기기의 해외진출 지원

③ [공약 12]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 5 문화강국 실현

[공약 13]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 확대

[공약 14] 한류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이행방안 01] 콘텐츠 제작-유통-수출-해외사업까지의 모든 단계에 금융지원으로 K-콘텐츠의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입은행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플랫폼 산업 ‘제작-유통-수출-해외사업’까지 단계별 금융지원·투자금융 강화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초기 제작자금을 통한 IP(지식재산권) 확보, 해외판매·리메이크 등 수출확장, 해외상영관 등 해외사업 지원¹⁷⁾
- 고위험·기업영세성 등으로 대출 대비 투자수요 많은 콘텐츠·플랫폼 기업에 직접투자, 펀드 등 투자금융 확대
- AI 기반 무인촬영 등 문화기술 R&D, 국내 OTT 기업(티빙, 웨이브 등)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의 도약 적극 지원

④ [공약 15]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 진입

[이행방안 01] 방산금융 패키지 일괄 제공과 수출지역 및 품목 다각화 지원

-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 통한 방산금융 패키지를 이용해 사업 단계별 금융 일괄지원 및 타금융기관 연계 주도, 수출지역·품목 다변화 등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입은행을 통해 사업단계별 필요한 금융을 일괄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지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연계 주도
- 수출대상 지역·품목·수출자 다각화 지원

17)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의 협업을 통한 리스크 분담으로 유망 중소제작사를 위한 정책금융 가용성 확대

⑤ [공약 16]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이행방안 01] 빅테크 강국을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과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 운영

- 산업은행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산업은행은 첨단·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 운영
 - 문화·콘텐츠, 로봇, 방위·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대상 추가 및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 개편대한민국리바운드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 90조원 = 핵심산업 설비투자지원 특별자금 +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확대) + 주력산업 위기극복 프로그램(신설)
 - 10조원 = 첨단산업 펀드
 - 지원대상은 미래전략산업, 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영위 기업
 - 자금용도는 기업의 신규 운영자금, 설비투자, M&A 및 펀드 출자
 - 지원방식은 대출, 직·간접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차관단 대출(Syndicated Loan)
- 수출입은행의 ‘첨단전략산업 프로그램’ 통해 5년간(2025년 - 2029년) 50조원 공급
 -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배터리·바이오·첨단전기전자(AI, 로봇 등)에 투자
 - 글로벌 주도권 유지 및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첨단설비 투자 지원

[이행방안 02] 경쟁력 상실산업에 대한 신속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금융의 지원

- 워크아웃(기촉법) 진행 시 금융권 신규자금 지원 방안 개선
 - 신속한 구조조정의 핵심은 신규자금 지원
 - 현재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규자금 NPL등급(D등급)으로 간주 → 금융권의 신규자금 지원 한계(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움)

- (개선방안) 신규자금지원 건에 대해 별도 신용등급 부여 및 정부보증기관(신보,기보 등)의 특례보증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산업구조조정 TFT(컨트롤타워)』 상시 가동 필요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구조조정 TFT」 상시 운영
 - 국민주권정부 임기 중 취약산업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실시
 -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유도책 지속 마련
- 정부주도 산업재편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권 여신 지원 시 면책 적용 필요

[이행방안 03]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위한 「자산유동화 사모대출펀드(PDF)」 설립

- 민·관 합작 PDF 설립하여, 기업자산(제조설비, 매출채권 등)에 투자(〈그림 5〉 참조)

〈그림 5〉 PDF 구조도(예시)



- 자산매각에 대한 세금 감면·이연 등 민간금융에 인센티브 마련
- 법정관리의 유연성 확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 필요
- 정부 정책사업 지원 감안해 민간 금융의 위험가중치 완화 필요

⑥ [공약 17]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안보 기반 구축

[이행방안 01]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폐수 등) 지원 강화

-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인프라(전력, 용수, 폐수 등) 지원 강화¹⁸⁾
-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로 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연기금·민간금융·

18) 2025년 7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수권자본금을 30조에서 45조로 상향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개인투자자)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젝트(「가칭국민펀드」) 조성 지원(총 10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 조성)

- 국민펀드 조성 방식으로는 ①정책펀드 공동조성(산업은행 참여로 재정부담 경감), ②Joint Venture 투자(산업은행 시설투자), ③M&A 투자(산업은행 M&A자문·금융주선 등)

[이행방안 02] 공급망기금 지원 확대로 첨단산업 핵심소재 확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

-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강화로 첨단전략산업, 원료광물, 해운물류, 식량·의약품, 석유·철강 등에 튼튼한 공급망 안보 기반 구축(2025년 최대 10조원)
- 이차전지·반도체, 원료광물, 식량·의약품 및 석유·철강 등 경제안보 주요 분야의 공급망 재편 대응 지원
- 지원 방법은 금리 인센티브 강화(초저금리 대출) 및 직·간접 투자 확대

⑦ [공약 18]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이행방안 01] 국민펀드 조성

- 총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로 하여, 모든 경제주체(연기금·민간금융·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젝트(「가칭국민펀드」) 조성 지원(총 10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 조성)
- 국민펀드 조성 방식 : ①정책펀드 공동조성(산업은행 참여로 재정부담 경감), ②Joint Venture 투자(산업은행 시설투자), ③M&A 투자(산업은행 M&A자문·금융주선 등)

[이행방안 02] 반도체 지원 대폭 확대로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뒷받침

- 반도체 지원 강화를 통한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패키징·칩 제조·후공정의 모든 밸류체인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종합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기여

- 메모리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HBM 기술개발·확보 등에 지원
-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별 R&D, 설비투자, 원료수입, 장비 수출 등 맞춤형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 구축 및 소부장기업 육성에 투자
-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국내외 생산시설 확충 지원 및 전국 U자형 재생 에너지벨트 조성 등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자

○ 성장기반 구축

❶ [공약 06]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이행방안 01]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벤처투자 회수시장 지원 목적 펀드 조성 및 벤처 M&A 시장 활성화¹⁹⁾를 통해 모험자본 회수시장의 선순환 촉진 지원
 - 세컨더리펀드(기존에 조성된 펀드로부터 지분 인수 등) 확대 조성을 통한 모험자본 회수시장의 선순환 체계(투자→회수→재투자) 구축
 - 국내 정책금융기관 중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²⁰⁾를 하는 산업은행의 벤처투자 역량(축적된 벤처 네트워크, M&A 자문 역량)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M&A 수요 발굴과 다양한 M&A 컨설팅 서비스 제공

❷ [공약 08]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이행방안 01]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 형식의 인큐베이팅

- 산업은행의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투자지원 체계인 「KDB 벤처플랫폼」과 같은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초기창업단계) KDB NextONE(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 과학기술원 연계투자(기술사업화 및 스타트업 지원)
 - (도약단계) KDB NextRise(아시아 최대규모 스타트업 Fair) + KDB NextRound(시장형 IR 플랫폼)
 - (스케일업 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신시장 진출 및 해외투자유치) + 성장자금 지원(투자·융자 복합·금융,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19) 2016~2023년 동안 미국은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사는 91.6%, 반면에 한국은 9.5%에 불과

20) 산업은행의 2024년까지 누적 벤처투자 실적은 약 7조 2,000억 원

③ [공약 11]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이행방안 01] 창업단계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은행은 국내 최대 벤처투자기관으로서 성장단계별 벤처투자 로드맵에 따라 연간 5,000억원 이상 직접투자 집행
 - 산업은행의 중점투자 대상인 중·후기기업은 스케일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하여 K-유니콘으로 육성 지원
 -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초기 딥테크 기술기업 중심으로 지원 확대

[이행방안 02] 지역성장펀드조성(정부·금융회사·지자체·지역사회 공동출자)

- 산업은행·지방자치단체·지방은행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특화 펀드 조성 확대
 - 구체적인 투자 방안 : ①지방은행과 함께 지역 소재 혁신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재간접펀드(모태펀드) 조성, ②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녹색 전환 및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펀드 조성, ③지자체(정부) 및 민간자본과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펀드의 목적과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 산업은행이 참여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사례로는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등

④ [공약 15]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산업의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화

[이행방안 01] 고부가 K-공항 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고효율·친환경 항공기 도입, MRO 사업 참여 등 항공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수출입은행을 통한 고부가 K-공항 해외진출 지원과 함께 부품·정비·서비스 등 항공산업 전반 신규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인천공항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K-공항모델의 수출지원을 통해 공항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
 - 고효율·친환경항공기,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 등 미래경쟁력 확보, 운항

⑤ [공약 16]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이행방안 01] 북극항로 거점 배후단지 조성 위한 부산·울산항 등 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

[이행방안 02] 쇄빙선 등 극지운항 특수선 개발·제작 지원

[이행방안 03] 국익 관점 북극항로 논의 위한 국제협력 지원

- 미래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해 관련기술 및 인프라 개발, 쇄빙선 등 특수선 제작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북극항로 시대 경쟁력 확보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선·해운·항만을 위한 금융확대와 북극권 개발 국제협력 강화
 - (조선) 북극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선박(쇄빙선, SMR 탑재 선박)과 컨테이너선 및 LNG 운반선 등 북극항로 활성화 관련 특수선 수준 지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및 제작금융 지원 등)
 - (해운) 북극항로 투입·운항을 위한 선박 발주시 금융 조건 우대를 통해 신조 투자 촉진
 - (항만) 해양 인프라 펀드 투자를 통해 부산·울산항의 극지 연계 거점 항만화와 관련된 항만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사업 적극 지원. 항만과 연관된 물류, 에너지기업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 조성 추진
 - (북극권 개발 국제협력) 북극이사회, 역내 다자협의체 등에서 국익을 감안한 국제협력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다각적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북극항로 협력사업 발굴 및 신성장 동력화

⑥ [공약 17]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해운 강국 실현

[이행방안 01]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국적선사 선박금융 확대, 미 군함 MRO 수주 지원, 중소조선사 상생협력 등으로 해운강국 도약

-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 스마트·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통해 해운강국 도약 및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로 상생 생태계 구축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친환경 연료 및 고부가 선박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제작자금 지원, R&D 등 적극적 지원

- 미 군함 MRO 수주확대 등에 따라 국내 조선사·기자재업체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등 지원
- 경영여건이 개선된 중소기업 신규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추진,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하여 대·중소 동반성장 생태계조성 기여

- ⑦ [공약 18]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
- [공약 20]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
- [공약 21]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
- [이행방안 01]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 [이행방안 02]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중견·대기업으로 도약 뒷받침
- [이행방안 03] 중소기업 ESG 경영혁신 및 탄소중립 지원
- [이행방안 04]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환경 대응력 제고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사다리 구축, 통상환경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주요과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 중견기업, 더 나아가 글로벌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수출입은행이 통상변화에 의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대응을 위해 2025년 4월부터 도입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확대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및 부대 설비투자 적극 지원
 - 「중소·중견기업 특화 지원체계」 구축
 - 산업은행의 중견기업 전용 특별자금(「KDB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자금」) 확대 개편²¹⁾

[이행방안 05] 구조조정 대상 산업 내 중소기업 지원

- 민·관 협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 조성, 경쟁력 상실산업 재기 지원(〈표10〉)

21) (지원대상) 중견기업 → 중견·예비중견기업, (지원규모) 1조원 → 2조원(+1조원)

참조)

- 경쟁력 상실산업(ex. 화학산업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보

〈표 10〉 민·관 협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 조성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금융기관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굴 및 재기 유도
민·관 구조조정 펀드	• 펀드 활용, 경쟁력 상실산업의 여신담보(공장 등) 매입 - 매입가 : 시장 평균 매각률 대비 할증 매입 • 세일즈 앤 리스백(SLB) 운영(시장 대비 낮은 임대료 적용) • 업체 정상화시 기업에 재매각

- 여신담보 할증 매입, 저임대로 적용 등 해당 기업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정부 정책사업 지원 감안해 민간 금융의 위험가중치 완화 필요

⑧ [공약 22]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

[이행방안 01] 민·관·금융 원팀 코리아로 해외 고부가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확대

- 경제전반 성장동력 확보 및 건설업 활로 모색을 위해 민·관·금융 원팀코리아로 해외수주 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건설에 필요한 사업개발·발굴, 입찰·계약, 건설·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금융지원
 - 수출입은행의 중동·아시아 등 전통수주시장 외 호주 등 선진국 사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주, 시장다변화 통한 체질개선

⑨ [공약 24]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 2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이행방안 01]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 강화

[이행방안 02] ESG 금융 지원 확대로 우리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견인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산업전환 촉진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금융 확대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사업구조 개편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위한 R&D·시설투자·운

영자금 등 사업단계별 우대금융 지원

- ESG 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견인
-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여신체계 마련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조기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공정경제

❶ [공약 15] 청년층의 자산증식 지원과 금융접근성 제고

[이행방안 01] 청년·서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 청년과 서민층이 ISA를 통해 지속적으로 충분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ISA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확대
 - 현 ISA제도는 납입한도 제한, 낮은 세제혜택 한도 등으로 장기(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족²²⁾
 - 일본 수준으로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상향 조정해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필요²³⁾(※ 2023년 1인당 GDP: 한국 3만 5,563 vs. 일본 3만 3,849 달러)
 - 이미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국내투자형 ISA 도입,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제도 개편을 시도했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국내투자형 ISA 신설, 납입한도와 세제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ISA 제도 개편의 신속한 추진 필요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대상 포함 등에 대한 이견 조율 문제가 있다면, 청년·서민·농어민 관련 혜택 확대 등 핵심 내용에 관한 부분적인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

22) 2021년 투자중개형 ISA를 도입하고 계좌 활용 편의성을 높여(ex. 의무가입기간 축소, 납입한도 이월 등) 가입자와 가입액이 증가하긴 했으나, 절세효과가 미미*해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

*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자소득세액 기준 30.8만원 절세)에 불과해 세액 감면액이 작음

23) 일본은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장려하고자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 新 NISA를 출시(2024년)한 결과, 계좌 수와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 2024. 9월 기준 계좌 수 23.3% 증가, 2024. 1~9월 투자금액은 전년동기비 3.4배 증가)

* 과거 NISA는 적립형/일반형 중 반드시 선택 vs. 新 NISA는 한 계좌에서 두 종류를 병행 가능, 연간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

○ 국가균형발전

① [공약 04]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이행방안 01] 지역대표 전략산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산업은행의 지역성장 지원조직을 비수도권 4대 권역별 정책금융 조직으로 개편
 - 현재 산업은행의 핵심 업무는 본점에 집중, 지역의 지점은 대출 형태로 국한되어 지역성장 업무 수행에 한계
 - 산업은행의 기존 지점의 대출 기능 외, 본점의 벤처 투자, 펀드 조성, 심사 기능을 배치하여 지역 내 완결형 지원체계 구축
 - 산업은행의 조직을 권역별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본점 지중화 해소 및 권역별로 동일한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
 - 현재 충남 천안시에 설립 추진 중인 산업은행의 중부권 정책금융 플랫폼을 모델로 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대 추진. 서남권 정책금융 플랫폼은 광주, 대경권은 대구, 동남권은 부산에 위치
- 산업은행 외 지역 금융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하여 정책금융 시너지 효과 유발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함께 하나의 공간에서 벤처기업 지원, 일반 투·융자 및 보증 등 복합금융 지원체계 구축
-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성장펀드」 조성
 - 산업은행·지방자치단체·지방은행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특화 펀드 조성 확대
 - 구체적인 투자 방안 : ①지방은행과 함께 지역 소재 혁신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재간접펀드 조성, ②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녹색 전환 및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펀드 조성, ③지자체(정부) 및 민간자본과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펀드의 목적과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 산업은행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참여 사례로는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등
-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복합 금융 프로그램 마련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지역 내 모험자본

축적 및 혁신성장 지원체계 조성을 통해 지역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구체적인 전략 : ①지역 혁신·벤처 인큐베이팅 확장, ②지역 혁신·벤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융자, ③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도권 투자자, 지방은행 및 지자체 등과 지역특화 펀드 조성
- 산업은행의 4대 권역별 플랫폼과 타 정책금융기관(신·기보,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여신, 보증 및 사업재편 등을 제공하는 복합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종합지원서비스(One-Stop)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② [공약 18] 농업의 미래농산업으로 전환

[이행방안 01] 농식품·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이행방안 02] 미래형 푸드테크 산업 R&D 및 M&A 지원

-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농식품·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미래형산업화를 위한 지원강화
- K-컬처 확산과 함께 해외의 관심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농식품, 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
- 스마트팜, 그린바이오(동물용의약품 등) 등 미래형 푸드테크산업의 기술·상품개발을 위한 R&D·M&A·설비투자 지원

○ 기후위기 대응

① [공약 01]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

[공약 02]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이행방안 01]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중 육성

-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금융·비금융역량 집중하여 기후테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 펀드, 지분투자·후순위 대출상품 등 기후테크 전용 금융상품 개발
- 산업은행의 벤처·스타트업 플랫폼(Next시리즈, V:Launch)과 중소기업은행의 창공 프로그램과 녹색금융 및 맞춤형 지원을 이용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이행방안 02] 탄소중립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저탄소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산업은행의 다양한 녹색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탄소 다배출 기업의 탄소중립 필요자금²⁴⁾의 50% 이상 지원을 목표
 - 산업은행의 저탄소화 추진 기반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 저탄소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²⁵⁾
 -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대기업 추천 협력사 앞 금융지원을 포함한 컨설팅, IR기회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저탄소 추진 기반 제공
 - 중소기업은행의 녹색금융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저탄소전환 지원 강화

[이행방안 03] 친환경 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 등 친환경 분야 지원 확대

- 주력산업의 저탄소전환,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과 함께 에너지안보·수출경쟁력 확보 도모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배터리,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친환경 인프라 등 산업을 차세대 글로벌 리딩산업으로 육성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을 통해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배출 업종의 친환경 사업구조 전환 관련 설비투자·기술개발 및 M&A 등 지원

② [공약 03]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공약 04]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이행방안 01] 해상풍력 발전 지원,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지원

-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모험자본 및 대규모 자금공급 프로젝트 본격 개시(총 85조원의 금융수요 발생 예상)

24) 연간 22조원 = 2,471조원(2021년~2050년) × 산업부문 배출량 비중 36% × 다배출업종비중 73% ÷ 30년(자본시장연구원, KOSIS)

25) 2025년 4월 LG에너지 솔루션과 1호 MOU 체결 완료

- 미래에너지 펀드(30년까지 9조원 조성)등을 활용하여 지분투자·후순위대출 지원하여 총 10조원 규모의 모험 자본 조성
- 아직 상업화 초기단계에 놓여 있는 해상풍력은 민간금융기관이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주도하고 민간 참여 견인하여 총 75조원의 선순위대출 조달
-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금융 및 PF금융(민간투자방식)등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 지원
- 직접대출,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해 한국전력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
- 해외 민간 송전망 사업 금융주선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 앞 금융자문·주선 제공(다만, 민간사업자가 송배전망 사업 가능토록 법·제도 마련 필요)
- 정부는 송전망 사업 설치 시 필요한 송전망 설치 지역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주민들과의 적극적이고 빠른 소통 등의 행정 지원 필요

[이행방안 02] 신재생 발전과 송전망 부문 경쟁력 확보로 에너지안보·저탄소 전환 동시 달성

- 탄소중립·녹색성장 견인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프로그램 가동
 - 화석에너지 → 재생에너지 전환 견인 위해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①해상풍력발전, ②에너지고속도로, ③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 금융 주선·참여
- 산업단지 내 지붕형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원
 -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내 발전사업, 단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 사업에 금융자문·주선 실시
 -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산업단지 내 지붕형 태양광을 통한 신속한 RE100 달성 위한 전용 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공급 추진

○ 생활비 절감대책

❶ [공약 03] 1인가구·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확대

[이행방안 01] 청년 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층 주거지원(〈표 11〉 참조)

- 청년 임대주택 : 유희 부동산 부지에 LH·SH 협업 청년주택 건설 및 임대
 - 매각, 지분출자 등 방법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사회공헌 목적)

〈표 11〉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방안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매각	· 청년주택 개발 대상자(SH·LH 등)에 매각
지분 출자	· 금융기관·리츠운용사에 매각 후 부동산펀드 지분 출자

- 장기임대주택 관련 금융회사 사업 참여 방향 은행법 개정 검토 필요
 -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 허용 등(2024.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에서 논의)
- 참여 금융사에 대한 채널 관리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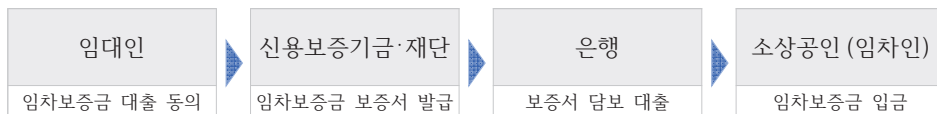
❶ [공약 01]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공약 04]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 건설

[이행방안 01]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소상공인 임차보증금 유동화 지원
(〈그림 6〉 참조)

- 임차보증금 전용 신용보증서 발급 후, 은행 저금리 장기분할 상품으로 취급
 - 소상공인의 묶인 자금(임차보증금)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저금리 대출 전환
 - 신용보증서(보증비율 80%~90%) 담보대출로 민간은행과 기관이 공동 리스크관리

〈그림 6〉 임차보증금 유동화 구조 예시



* 임대차계약 연장시, 임차인-임대인 동의로 자동 연장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은 은행에 반환(원금 상환)

- 상가임대차 계약정보 공유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플랫폼) 구축 필요
- 신용보증기금·재단 등 금융권과의 상시 협업 제도 마련

[이행방안 02]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은행 자체상품 출시

- 은행권 공동 상품 외 은행 자체 채무조정 상품 마련(〈표 12〉 참조)
 - 연체우려 차주 외 일시적 연체자까지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제공

〈표 12〉 은행 자체 채무조정 상품 출시(안) 예시

구 분	현 행	추 진
상품 추가	·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119 Plus	· 현행 + 자체 채무조정 상품
대상 확대	· 연체 우려 차주	· 현행 + 연체발생 90일미만 차주
지원 강화	· 대환 전 금리 유지 · 장기분할상환	· 연체이자 감면 ·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 장기분할상환(5 ~ 10년)

- 은행 자체 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에 한해, 연체기록 삭제 필요
- 정부 정책사업 지원을 감안하여, 민간 은행(취급자)에 대한 면책 제도 도입 필요

○ 저출생·고령화 대응

① [공약 08] 고령자 친화주택·은퇴자 도시 통해 어르신 주거문제 해결

[이행방안 01] 양질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

- 보험사 주도의 요양사업 대형화와 서비스 질 제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상의 요양원은 공급 여유가 있으나, 입소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시설은 부족
 - 자본력을 가진 보험사를 통해 요양업 구조재편 추진
- 신탁과 리츠를 활용한 중산층 시니어 대상 실버스테이 공급 확대
 - 실버타운과 같은 고령자 주거시설은 노인 인구 대비 공급이 크게 저조
 - 특히, 중간소득/중간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은 공백
 - 민간자본을 통한 공공 재정부담 축소 및 운용사의 전문적인 운영·관리
- 보험사에 대해 장기 임대권 기반의 요양시장 진출 허용 필요

- 토지, 건물 소유 요건에 따른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보험사의 사업 참여 촉진²⁶⁾
- 단, 요양시설은 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사회공헌의 목적이 크므로, 참여 보험사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30년 장기 입차, 현금성 자산 일정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추가 규제 법안 역시 필요
- 수요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공급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일정 소득(상위 30~70%) 수준의 시니어를 위한 전용 보조금 지원
 - 중저가 실버스테이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 신탁, 리츠 등 민간 사업자 세금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 제공

② [공약 10]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노후소득 보장 대책 강화

[이행방안 01] 주택연금의 일시적 지급방식 확대

- 주택연금의 일시적 인출 선택권을 확대
 -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이라는 목적에 따라 일시적 인출이 제한적이고, ‘연금수령’을 강제하도록 상품이 설계²⁷⁾
 - (제안) 노후 생활비 마련을 넘어 현금흐름 개선, 주택 유동화 지원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복지 제공 차원에서 주택연금 상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전액 일시금 수령, 일시금 한도 상향, 수시인출 허용)
- 주택연금 지급방식 다변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관련 규정 변경 및 신규 상품개발 필요
 - 연금수령 없이 전액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지급방식을 고안하거나, 일시금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
- 단, 정책 역모기지 취지와 달리 유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중산층 고령자의 실질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용도를 제한하거나, 일시금 대출상환을 설정할 필요

26) 2024. 8월 장기요양 서비스는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허용되었으나, 상당 기간 적자가 예상되어 사업 참여 주저

27) 일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혼합방식’에서도 자금용도별 인출한도(일반 50%, 대출상환 50~90%)를 제한 (※ 인출한도는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의 현재가치를 토대로 산정)

○ 광역공약

① [공약 02]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부산 육성

[공약 07] 북극항로시대 대비해 울산항을 오일·가스 등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기지로 육성

[이행방안 01] 북극항로를 위한 육해공 트라이포트로의 부산 육성

[이행방안 02] 부산·울산항 등에 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북극항로를 위한 부산·울산항 등에 항만 인프라 건설 지원
 - 해양 인프라 펀드 투자 및 항만시설 건설자금 지원을 통해 부산·울산항의 극지 연계 거점 항만화와 관련된 항만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사업 적극 지원. 항만과 연관된 물로, 에너지기업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 조성 추진. 선박서비스(LNG) 금융 확대

(3) 금융산업 발전과 효율적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 효율적 정책금융 업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별 업무 분장 필요

-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는 매우 중요
- 하지만, 여러 정책금융기관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가 다수 존재하여 정책자원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대표적인 중복 업무 사례로는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무역금융, 정책보증 업무, 온렌딩(on-lending) 대출 등을 들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의 여러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중복 지원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 일부 기업에 보증재원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남
 - 수출입·무역금융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기관에서 중장기 수출보증(보험)상품 등 일부는 각 기관이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혈 경쟁이나 비효율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에도 보증 지원 대상이나 상품의 경계가 명확

-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복 보증 제공이 문제로 지적
-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자금 지원이 70% 가까이 유사 사례로 중복되어, 한정된 정책재원의 효과적 배분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
-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의 명확한 분장 및 필요시 통합 논의(일부 기관 통합 또는 기능 재배치) 필요
- 특히, “10개 이상의 부처와 수십 개 기관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분산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일부 기능은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전문가의 지적 반복
- 비핵심적·중복 업무는 정리하고, 민간이 영위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부처 간 연계 강화와 데이터 공유 등 일원적 관리체계 정립 필요

○ 민간금융의 정부 정책 참여를 위한 민간금융에 인센티브 제공

- 국민주권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금융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
- 특히, 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구조개편, 청년·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청년·서민층의 자산증식과 포용금융을 위해 민간금융의 참여 필수
- AI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액투자건(〈예〉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GPU 구매 사업, 발전소 등)의 경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적극 추진을 통해 민간 자본 참여 활성화 유도
- 정책금융 수반 사업에 투자를 집행할 경우, BTL 사업과 같이 위험가중치 특례²⁸⁾를 적용하여 수익성 확보와 장기투자를 지원
- 국내 규제의 보수적 부분 완화(바젤 III 자본규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를 통해 금융회사의 추가 자본 여력 확보
- 국가 주도 정책 사업에 대해 위험가중치 일괄 특례 적용²⁹⁾하여 정책금융(산은/기은/신보 등) 사업에 민간 투자 참여 유도
- 은행권 BIS 규제개선 TFT 건의사항 신속 시행을 통한 민간금융의 추가 투자 여력 확보

28) BTL 사업 위험가중치 : 여신 0%, 지분투자(주식) 100%

29) 주식 및 정책펀드 출자 지분 등에 대해 위험가중치 400% → 100% 적용

- NPL채권의 경우 담보정보 반영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 위험가중치 적용요건 완화(150% → 100%)하고 사후 취득 담보도 선순위로 인정
- 비상장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위험가중치 하향 검토(400% → 250%)
- 「판매중단된 금융투자상품 DLS, DLF」 관련 손실사건 배제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244항에 의거 폐지된 사업 손실사건 제외 가능
- 중소기업/서민금융 등 정부시책성 상품의 기타영업비용은 이자수익의 차감 항목으로 적용
- 위의 인센티브 부여로 추가 확보된 자본 여력은 AI/미래 신성장 산업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예시) 위험가중자산 5조원 감축 시 기업금융 40조원 추가 지원 가능
 $5조 \div 50\%^{30)} = 10조원$, 4대 금융지주사로 확대시 40조원 지원 여력 확보
-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 한 ‘상생지수’ 도입 검토
 - “모두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금융의 포용적 역할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상생지수’ 도입
 - ‘상생지수’가 높은 민간은행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래 은행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민간은행의 자발적인 상생활동 참여 확대 유인
- 정부의 민간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단순한 민간금융의 정책 참여를 넘어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 필요
 - 민간금융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효율적인 자금조달과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합리화 필요
 - 금융과 AI·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같은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생겨난 핀테크 영역과 같은 금융영역과 비금융영역의 융합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합리화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핀테크 영역의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원과 같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 국민주권정부의 ABCDEF 첨단전략산업 발전 공약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30)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내부등급법 및 표준방법 대상 전체)

매우 중요

-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부족하고 모험자본과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도 많이 떨어짐(5페이지의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한 녹록치 않은 상황」을 참조)
- 경희권 외(2024)³¹⁾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결정적 장애요인과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기술금융·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함
 -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①미래 가치 기반 장기 투자 저해 법률·제도, ②정보비대칭 극복수단 및 다양성 부족, ③투자 대상 선별(Screening) 역량 미흡, ④고급 인력 벤처 진입 유인 부족, ⑤금융수단 수준 미흡 등을 언급
 - 위의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책으로 ①금융수단 고도화, ②상장·상장유지제도 시장평가 체제 전환, ③제도권 금융 기업 시장 진입 확대, ④민간 주도 정보 생산 전문·특화 기업 육성 등을 제시함
- 결국,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금융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금융 방식을 기존의 저금리 대출을 통한 지원에서 이제는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지분투자 형식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 있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투자 대상 선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심사 파이낸싱” 시스템 개발,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수단 고도화(다양한 유동화 상품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의 참여 확대 필요
-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개선 필요
 - 정책펀드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던 사전심사기간의 단축 필요
 - 대신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기금의 운용과 사후심사 강화
 - 단, 사후심사에는 정책펀드에 참여하는 민간금융의 면책심사를 강화하여 민간금융이 정부 정책 참여를 통해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덜어줌
-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에도 벤

31) 경희권·김상훈·정지은·이 준·정은미·최윤희·최민철·김종기·남상욱·김양평. (2024).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혁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21, 산업연구원.

처투자를 허용하여 기술금융의 다양성과 규모 확충 필요

- 체계적인 기술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³²⁾를 이용한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종합 투자 플랫폼 구축 필요

32) 2025년 7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부록〉 용어설명

-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 시장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G20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금융기관 보유 중(한국, 멕시코, 튀르키예는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 ISA는 2016년 도입되어 자산 형성과 절세를 동시에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어 더욱 다양한 투자 선택지가 제공
-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원조자금의 일종으로, 개발도상국 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 금리보다 낮게 지원하고, 이자율 차이는 정부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로 보전
- **공급망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제안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조성한 정책금융 기금.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하고, 핵심 산업의 국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 운용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이 원조는 자금, 기술, 인력, 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로 양허적(무상 또는 저리의 조건)으로 제공
-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민간기관을 뜻함. 대표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에 해당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획재정부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동 기금의 운용을 통해 유상원조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 **NPL 채권(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 :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의미. 즉, 채무자가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채권. 국내 금융권에서는 보통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부실채권으로 간주
- **세일즈 앤 리스백(SLB, Sales and Lease-Back)** : 기업이 보유한 자산(주로 부동산, 기계, 설비 등)을 매각한 후, 동일 자산을 다시 임대하여 사용하는 재무 전략. 즉, 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 선주(선박을 주문하는 사람 또는 회사)가 조선소에 선박 건조를 의뢰하면서 선수금을 지급할 때, 만약 조선소가 파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금융기관(은행 또는 보험사 등)이 대신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보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완공 즉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하여 수익을 얻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 주택을 담보로 하여 소유자가 집을 팔거나 추가 월별 상환 없이 주택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 주로 만 55세 이상(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
- **유동화 회사보증(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신보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와 안정적인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운영·관리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자산유동화 사모대출펀드(PDF, Private Debt Fund)** : 특정 자산(부동산,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화 금융 상품. 주로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되며, 투자자들은 비유동성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수익 추구
- **차관단 대출(Syndicated Loan)** : 여러 금융기관(은행 등)이 차관단(syndicate)을 구성하여, 한 명의 차주(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에게 공통의 조건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
-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임시 법인.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설립 방식을 같지만, 특정 프로젝트 수행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짐
-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 대규모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범용 AI 모델로, 모든 AI 기술 응용의 기초가 됨. 대표적인 예로 Open AI의 GPT, 구글의 Gemini 등이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 특정 사업(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 기존의 기업 대출과 달리,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과 자산을 담보로 사용. 주로 대규모 인프라(발전소, 도로, 항만 등)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활용

- GPU(Graphics Processing Unit) : 기존의 CPU보다 수많은 코어를 활용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 이미지, 동영상 렌더링, 게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MRO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 자재를 관리·제공하는 사업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 정부와 민간 부문이 장기 계약을 통해 공공 인프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방식을 의미.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보다 효율성과 창의성, 자금 조달의 다양성, 위험 분산 등의 장점을 갖고 있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